

다산포럼

대학 구조조정, 학부모들도 알아야 할 사실 (2)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

지난번 칼럼에서 필자는 같은 제목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밝혔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한국 대학에는 사립이 너무 많고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대학교 국공립이 중심인 선진국형으로 바뀌면 고액 등록금이나 교육 부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분이 호응해 주셨지만, 여기에 맞서는 견고한 상식 하나가 학부모들 뇌리에 박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즉 그레도 사립대학에는 '주인'이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

으로 통하고 우리 사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한, 대학을 앞으로 선진국처럼 공영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먹힐 리 없다.

그런데 이 상식이 과연 사실과 부합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몇 가지 짚어보겠다.

우선, 그런 생각은 현행법과 배치된다. 현 실정법에서 대학의 법적 주체는 사학법인이지 어떤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다. 물론 사학재단 설립자나 그 가족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재단이 제 기능을 못 하면 교육부는 이들을 모두 해임하고 다른 이사진을 파견할 수 있다. 혹 '주인'으로 행세하던 사람이 있어도 소유권은 커녕 운영에조차 참여할 수 없다.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교육기관을 세울 때 기부된 재산은 기부되는 순간 공익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학을 운영하던 '주인'이라도 대학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은 가령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할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소유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둘째, 대학의 재산은 대부분 학부모가 낸 등록금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개인의 것이 아니다. 대학은 엄청난 부동산을 보유

하고 있다. 물론 애초 설립자의 기부도 대이긴 하나 이후 팽창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세금 혜택과 인프라 지원, 등록금 적립을 통한 캠퍼스 확장 등을 통해 수백 수 천 배의 지가 상승이 이뤄진 덕분이다.

더구나 대학 운영도 대부분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재산을 개인이나 그 가족의 '소유물'로 간주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발상이다.

셋째, 대학 운영에서의 국제적인 인식과도 현격한 괴리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대학을 개인이 '소유'하는 곳은 없다. 대부분이 국립으로 구성된 유럽 대학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의 사립도 개인 소유인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운영도 공익이사들이 한다. 설립자 가족이 일부 운영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가령 코넬대학처럼 설립자 가문은 수십 명 이사진 가운데 한 명만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사학에 주인이 있어야 하는 이유로 흔히들 대학 발전을 들지만 이것은 한국 현실과 너무나 어긋난다. 누군

가가 주인 행세를 하는 대학일수록 문제가 많고 비리가 빈발하고 부실한 반면 어느 정도 운영의 공공성이 보장된 곳은 건설하게 성장해 왔다. 즉별 사학이 지배하던 삼기대의 경우 '주인'이 비리로 쫓겨난 뒤 관선이사들이 운영하던 시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나 두산이 '주인 행세'를 하는 중앙대가 오히려 혼란에 휘말려 있는 것은 일부 사례일 뿐이다.

법적으로나 현실로서나 세계적인 기준에서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이런 주장이 어찌하여 상식인 것처럼 횡행하고 있을까? 굳어진 사고 습관과 관행, 편견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승리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마스 페인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그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상식'을 설파하여 미국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 사립대학도 등록금이 운영비 대부분이고 소위 '주인'은 물론 재단조차도 재정적인 기여가 거의 없다. 사립대학에 주인이 있다면 등록금을 내는 학생과 학부모인데, 정작 그 주인들이 대학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 아닌가.

社說

공무원 성과급 제도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적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 공무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1998년 중앙부처에 처음 도입된 뒤 2003년부터는 지자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을 공무원 노조가 주도해 다시 거둬들이고 뒤 직급별로 똑같이 나눠 가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노조와 구청 간 부들 사이에 고소 사태로 번지고 있는 광주 서구청이다.

서구청은 10년 넘게 지급된 성과급을 모아 나눠 갖는 일을 관행처럼 지속했다고 한다. 물론 이런 일은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도 벌어지고 있지만 일부 단체장들은 공무원 노조의 관계망을 의식해 눈감아 주고 있다.

성과급 재배분이 드러나면 이들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균등배분한 성과급도 환수된다. 해당

지자체는 행정부로부터 '경고'를 받고,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임우진 서구청장이 '노조의 변칙적인 성과상여금의 재분배는 불법이자 탈법'이라며 행정부에 부당성 여부를 질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 또한 일리가 없지 않다. 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그 성과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출 세우기를 부를 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업무인 공무에 대해 민간 기업의 논리를 가져와 평가하고 경쟁시킨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뒤늦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다고 해서 10년 넘게 관행이 되고 있는 '성과급 재분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공직사회는 무조건 성과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 이제 무용지물이 된 성과급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고가 있어야겠다.

창작보다 생계 걱정 예술인들 대책 없다

광주 지역 예술인 중 절반가량이 한 달 수입 150만 원 이하인데다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최근 광주문화재단이 이 지역 예술인 34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50만 원 이하 46.7%, 월 평균 소득 150만 원 이하 46.7%, 월 평균 소득 150만 원 이하 46.7%, 월 평균 소득 150만 원 이하 4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4대보험 가입자는 51.2%였다.

이처럼 예술인들의 보험가입률과 소득이 낮은 것은 직업 특성상 정규직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응답자의 54.0%는 전업작가였고 정규직 피고용은 21.3%에 머물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술인 가운데 63.1%는 경제적 어려움을 문화예술 활동에 가장 큰 장애점으로 꼽았다. 물론 국제교류 기회 부족(23.3%), 시민

의 무관심(20.8%), 창작물 발표 기회 부족(14.0%) 등을 호소하는 예술인도 있었다.

사실 광주 예술인들의 열악한 실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광주 미술인들의 월 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 비율은 78.3%로 전국(평균 66.3%)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계를 위해 예술 활동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인 전용공간과 시설 확충, 협업시스템 구축 등 예술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모를지미 예술이 융성하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면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삶과 예술 속에서 '전쟁을 치르며' 사는 예술인의 현실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술가들이 불행한 도시는 문화도시가 아니다.

정촌 특·특

당신의 쪽빛, 정말로 푸른색입니까?



민은벨 광주여대 서비스경영학과 2학년

쪽빛의 달(月)이라는 5월의 공공연한 수식은 광주 앞에서 무색해지고 만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은 5월을 '핏빛의 달'이라고 일컫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급반로에서 일반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끔찍한 총격이 시작되었다.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이었으나 광주 사람들은 아버지를 잃고, 딸을 잃고, 스승을 잃었으며 죽어가는 친구의 모습을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유독 상을 치르는 집이 많다는 핏빛의 5월, 울음의 광주,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 불리는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 80년 광주는 뼈아픈 거름을 자처했다.

35년, 고자, 35년, 갓 난 핏방이었던 민주주의가 어느덧 중년의 성인으로 자랐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5·18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열어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민주, 그 시발점을 광주만이 기억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함께 누리고 있는 만큼 평

취하여 준 이들을 기리는 것은 선택 아닌 의무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7년째 정부와 씨름 중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이나,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염원했던 통일 정치는 짙은 색깔론자들로 인해 질타 받는 세상이 되었다. 왜곡되고, 조롱당하고, 5·18을 폭동이라 명명하는 이들이 거리로 나오기까지 걸린 세월 고자 35년, 5·18 세대라는 구슬픈 칭호로 불리는 80년대 아가들이 겨우 서른 다섯의 중년이 된 시간이었다.

당시의 역사를 기억하는 생존자들 유족들은 현재 외면당하는 5·18을 보며 그저 뒷발서린 눈으로 가슴을 쥐어뜯을 수밖에 없다. 최초 발표 명령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행방불명자들이 시신 수습역시 끝나지 않은, '사적'과 '공적'이 없는 역사를 매듭지어 줄 20대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마무리 될 뎌 투쟁의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은 어느덧 청춘에 불붙이는 20대들이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모인 5·18 민중 항쟁 홍보대사들이나 자원봉사자를 자처한 대학생들이 수 역시 적지 않았다. 이처럼 목 데려라 5·18의 뜨거운 열정을 토하는 청년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완성되지 않은 민주주의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다"고.

역사란 지났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5·18은 진행 중이다. 공포정치

가 극에 달했던 5공화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대한민국은 병들고 있다. 앞서 말했던 20대들의 이야기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발에 채어 짓밟히는 중이다. 입 닫은 언론들과 지식 잃은 부모들을 향해 쏟아지는 최루액, 물대포, 고요의 외침인 촛불은 짓밟히고 마땅히 민중을 지켜야 할 경찰들은 시민들에게 총을 겨눴던 1980년 군인들처럼 방패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조각된 기사를 내보내는 종편 채널을 보고, 5·18의 진실이 두려워 더럽히려는 자들의 인터넷 댓글창을 보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이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유가족 어머니의 이야기보다 꽃놀이 가기 좋은 날씨라는 기사가 나오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이다. 이 모든 것은 현실이며 쇠퇴한 민주주의는 결국 조금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고 하지 않았다. 이제는 산천만 알아서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나 내일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故윤상원 열사의 말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도장을 사수한 그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는가? 망월 묘역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마음 가벼이 승리의 화관을 건낼 수 있을 것인가. 영예로운 패배에 영예로운 승리를 더해

줄 수 있는 것은 5·18의 진실과 정확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퇴보 시대의 산증인인 '우리들'밖에 남지 않았다.

삼, 바쁘다. 인생, 바쁘다. 나의 일, 내 주된 책기에도 급급하여 험뜰이는 게 우리네 사정이라곤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묻고 싶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계엄군의 총칼에 당신이 그렇게 쟁겼던 '주변'의 선혈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 죽음에 보답하려 뛰어든 것만인 대답은 흔들리는 눈빛이 대신해 준다. 우리들은 모두 역사의 한 부분이며, 투쟁(鬪爭)의 한 구절이다. 즉, 35주년을 맞이한 5·18은 우리들이 행동하여 이뤄내야 할 진행형 항쟁이란 말이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열사들이 물려 준 그 정신을 지킬 것인지, 깨지는 것을 그저 바라볼 것인지.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개인의 것이 아닌 '공동의 것'이 되고 말 것이라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했다. 과거 20세기를 지나 현재 21세기를 장식 중인 대한민국의 2015. 과연 비극적이지 않다고 그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과거 5·18에 있었던 잔혹한 살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장담을 그 누가 감히 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해 따를 때마다.

기고

'수도권'만 대한민국은 아니다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몇 년 전부터 인기 있는 TV 오락프로그램이 주말 황금시간대에 방영되고 있다.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웃던 우리가 어느새 웃고 웃기는제로섬게임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져야하고 내가 하나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은 하나 잃어야 한다는 게임이론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가위바위보'게임도 마찬가지다. 두 명 중 한 명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게임이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투자의 효율성만 보면 아무런 제약 없는 경쟁도 좋겠지만 정책에 따른 이익을 얻는 특정 지역·계층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때로는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무한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는다. 수도권 규제정책이 대표적이다.

지난 60년대,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지방 사람들이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제성장 정책과 때를 같이하여 하나 둘 서울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70년대 이후 정부가 경제개발을 최우선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리고 자본과 경제도 집중되었다.

이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1982년 수도권경비계획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60년대 초까지 20% 내외에 불과했던 수도권 인구가 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0년에는 48.9%까지 상승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경비계획법 등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전체 인구의 49.6%, 총 산업체수 47.2%, 지역내총생산의 48.9%, 100대기업 본사의 95% 등이 국토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조만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치 우주의 '블랙홀'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흡수할 것 같아 보인다.

이런 한국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빨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 말 민관합동회의에서 언급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환관 및 공방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 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대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4개의 제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 중에 있는 데도 말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경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대해 시행령·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사항들을 구멍이 담 넘어 가듯이 아무런 국민적 합의절차 없이 해제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은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인구와 경제력 집중화로 국가발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물론 더 나아가 지역 간 갈등 초래 및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의 붕괴

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국토불균형 심화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어떤 이들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수도권이 나머지 지방을 모두 먹여살릴 수 있는 지의 의문이다. 지역균형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헌법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도전하는 생각과 발상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 국토를 고루 활용하는 지혜와 과학한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이자 기본 가치이며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럼에도 투자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발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無等鼓

"장하도다 기삼연/ 제비 같다 전해 산/ 잘 싸운다 김죽봉/ 잘도 죽인다 안 답살이/ 되나 못 되나 박포대."

구한말 시기, 대한제국은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에 의해 점차 국권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학자와 평민·상민·포수 등 많은 의병(義兵)들이 분연히 일어나 일본과 싸웠다. 이때 호남 지역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의병장 이름을 나열한 동요가 널리 불렸다고 한다. 김죽봉은 위삼연 부대의 선봉장 김태원을, 박포대 역시 김삼연 휘하의 포대 박도경을 일컫는다. 안답살이로 불리는 규충은 머슴 출신 의병장이었다. 답살이는 '머슴살이'를 뜻하는 말이다. 유학자인 기삼연 선생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장성에서 300명의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저항했다. 호남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부대를 결합해 장성에 연합 의병 지휘부인 '호남창의회맹소'를 설치, 많은 전투를 치렀다. '형제 의병장'인 나주 출신 죽봉 김태원·청봉 김을 의병장과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고경명 장군의 후손인 구한말 노천 고광순 의병장 집안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귀갑이다. 자기 고장의 익숙한 지형을 이용해 게릴라 전술을 펼친 이름 없는 의병들은 일제의 대토벌 작전에 의해 비록 산화했지만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밑거름이 됐다.

오는 6월 1일 장성에서 '의병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다. 지난 2011년 경남의령군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후 경북 청송, 충북 제천, 강원 춘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행사는 호남 의병활동을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비롯해 위태원을, 박포대 역시 김삼연 휘하의 포대 박도경을 일컫는다. 안답살이로 불리는 규충은 머슴 출신 의병장이었다. 답살이는 '머슴살이'를 뜻하는 말이다. 유학자인 기삼연 선생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장성에서 300명의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저항했다. 호남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부대를 결합해 장성에 연합 의병 지휘부인 '호남창의회맹소'를 설치, 많은 전투를 치렀다. '형제 의병장'인 나주 출신 죽봉 김태원·청봉 김을 의병장과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고경명 장군의 후손인 구한말 노천 고광순 의병장 집안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의병의 날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D I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